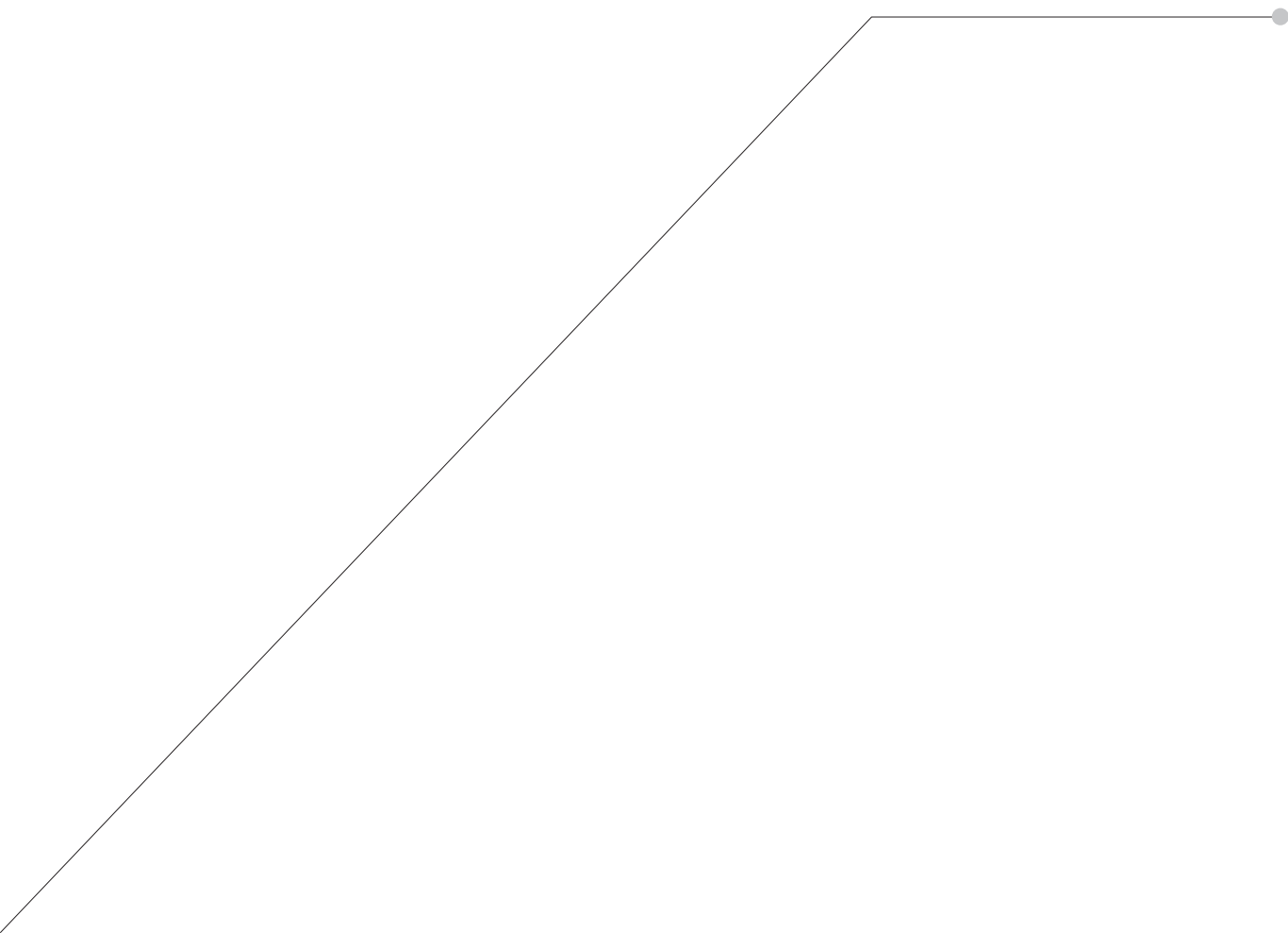


"또그리고 봄見 청聽 춘春"

**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2019. 5. 21.(화) 14:00

S컨벤션 라비홀



"또그리고
봄見 청聽 춘春"

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목 차

진행순서	01
발제(1)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필요성	03
발제(2)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국내외 사례와 충청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	23
발제(3)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35
부록 충청권 5개 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소개	55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소요	진 행 내 용	비 고 (진행)
(1부) 개회 및 축사	14:00~14:15	15'	문화다양성 퍼포먼스	예술단체 문화충동
	14:15~14:20	5'	행사안내	장현선(장애파트너스 그룹 대표)
	14:20~14:25	5'	개회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14:25~14:35	10'	충청권 문화다양성 협약식 (충청권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을 위한 협약)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14:35~14:45	10'	축사	충청북도, 충청북도 의회
(2부) 발제 및 토론	14:45~15:05	20'	(발제 1)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필요성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15:05~15:25	20'	(발제 2)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국내·외 사례와 충청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구자호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제정위원장)
	15:25~15:45	20'	(발제 3) 충청권 문화다양성 현주소와 나아가야할 방향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15:45~16:25	40'	(종합토론) 발제자 및 청중 간 자유토론	좌장 외 발제자 전원
(3부) 기타 행사	16:25~16:35	10'	축하 공연	예술단체 문화충동
	16:35~16:40	5'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6:40~18:00	80'	만찬, 간담회	참석자 전원

"또그리고
봄見청聽춘春"

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필요성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필요성

이 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발전

2차 세계대전 직후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단순히 여러 문화가 존재한다는 의미에 불과했다. 하지만, 탈식민지시기에 이르러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연계되어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국가 간은 물론 국내의 다양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1970년대 문화다양성의 초창기 개념은 문화다양성과 예술, 문화산업 그리고 창조성에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장르 예술을 다루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생활양식의 개념으로 다루어졌으며, 이후에는 문화다양성과 민주주의 개념으로 성, 인종, 국적에서 오는 주변화와 차별 배제를 막는 개념으로 발전해왔다.¹⁾

[문화다양성 개념 변화 단계²⁾]

구 분	내 용
제1단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가 예술 생산의 관점에서 논의된 시기 - 개별 민족국가의 문화는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 - 다원주의는 국가 간의 문제로만 간주
제2단계	- 문화의 개념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시기 - 냉전 체제 속에서 강대국의 지배와 이념적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증가
제3단계	- 문화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과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 - 연구와 정책 입안에서 큰 변화가 발생
제4단계	- 문화와 민주주의의 개념이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 -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개념이 확장

‘문화다양성’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모든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성’이며,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휴머니즘 차원의 개념을 나타낸다. 즉 다양성이 문화 창조의 자양분이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1) 니나오블젠 외(2008)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 노시훈 외(2014) 전남지역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 김현미(2016) 문화다양성 이해하기(강의 자료중)/중 문화다양성 개념발전 부문 재구성

2) 김규원(2014), 국외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페이지

창조'를 함의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문화적 차이, 문화다양성 그 자체가 자원이 되고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사회통합의 전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자 및 다수자 간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문화다양성은 한 사회나 국가, 혹은 권역에서 언어, 관습, 종교, 라이프스타일, 정체성 등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들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는 것을 의미 한다. 문화다양성은 한 시대나 한 국가의 문화적 동화나 통합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차이를 드러내며 공존하는 것을 지향한다.⁴⁾

문화다양성은 문화예술장르의 다양성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이 그동안 문화의 영역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현시점의 사회 현안과 깊이 맞닿아 있으며, 예술의 완결성을 추구하거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장려보다는 인권과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공존과 문화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법의 목적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새로운 문화창조로 밝히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번져가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의 대응에 있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이를 해결하는 주요한 도구이자 방식이고 목적 자체이다. 또한, 다양성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개인과 공동체의 창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 한국사회와 문화다양성

1) 확산되는 갈등 그리고 혐오와 차별

한국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각종 차별 행위가 도를 넘은지 오래 되었다. 성별, 세대, 성소수자, 장애, 외모 등 서로 다른 집단간 혹은 개인을 향해 갈등과 차별의 혐오 발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혐오발언들은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 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로 일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다.

3) 류정아(2017)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17.3.29, 국립고궁박물관) 발제 원고

4) 이동연(2013) 문화다양성 포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치녀·한남충·외궤·틀딱'...혐오 신조어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이데일리 | 2018.10.08 06:26

댓글 34

가 가

- '김치녀 Vs 한남충' 혐오표현이 세대간 남녀간 갈등 부추겨
- 해외선 법률로 혐오표현 규제...국내선 신용현 의원이 발의
- 전문가들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해” 지적도

[밀착취재] '태극기 집회'서 만난 보수·위마드... "文 정권 규탄" 어색한 합창

위마드 회원들이 왜 태극기 집회에 나타난 걸까.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던 한 노인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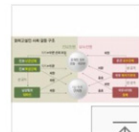
2018.08.15. | 세계일보 PICK | 네...



갈등 사회의 역설...위마드와 태극기 극과 극 '분노 동맹'

집회장 주변에는 '위마드'와 정반대편에 있는 여성 혐오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도 보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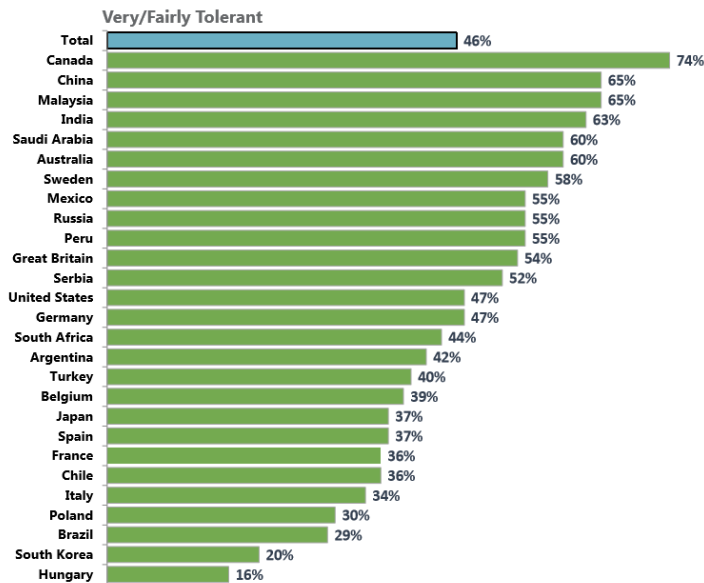
2018.08.17. | 서울신문 | 네이버...



2018년 4월 BBC 글로벌서베이의 다양성 포용정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7개 조사대상국 중 26위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배경,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 얼마나 관용적인가에 대한 응답에 단 20%만인 매우 관용적이라고 응답했다.

Overall, approaching half of people think that people in their country are tolerant of those with different backgrounds, cultures or views. Canadians most tolerant whereas Hungarians least tolerant

Q. And overall, how tolerant do you think people in [COUNTRY] are of each other when it comes to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cultures or points of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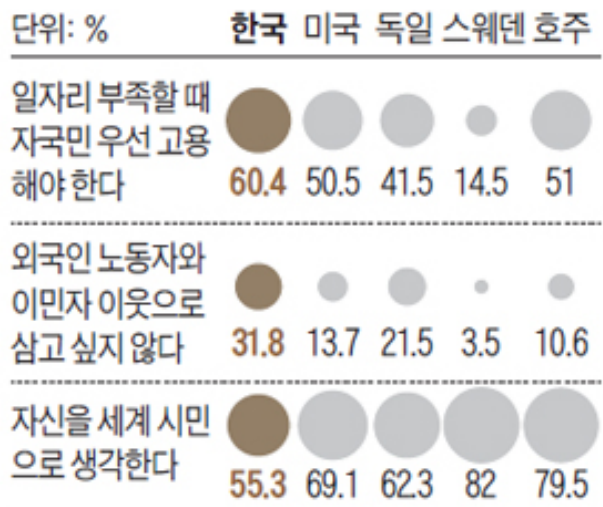


Base: 19,428 online adults aged 16-64 across 27 countries, 26 Jan-9 Feb 2018

또한, '세계 가치관 조사(WVS)' 중 다문화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의 항목에 한국인은 31.8%가 동의하여, 미국(13.7%), 호주(10.6%), 스웨덴(3.5%)보다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일자리가 부족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비율도 60.4%로 미국(50.5%), 독일(41.5%), 스웨덴(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0~ 2014년 실시된 6차 세계가치관조사의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성' 항목에서 한국은 59개국 중 51위였다.⁵⁾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갈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무척 심각한 편이다. 2016년 OECD 국가 34개국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사회갈등지수(Social Conflict Index)'에서 대한민국은 멕시코,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⁶⁾ 이와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정해식)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5년 5년 주기로 측정한 사회통합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5차례 모두 지수값 0.2(1 기준 상대값)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다.⁷⁾ 전 국가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국가별 다문화 수용 정도



※해당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2) 문화다양성 제도변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1948년 UN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류가 지속적으로 공존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천명했다. 이후 인류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세부적인 부분별 권리규약을 만들어 왔다. 유네스코에서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했다. 문화다양성 선언의 내용을 담아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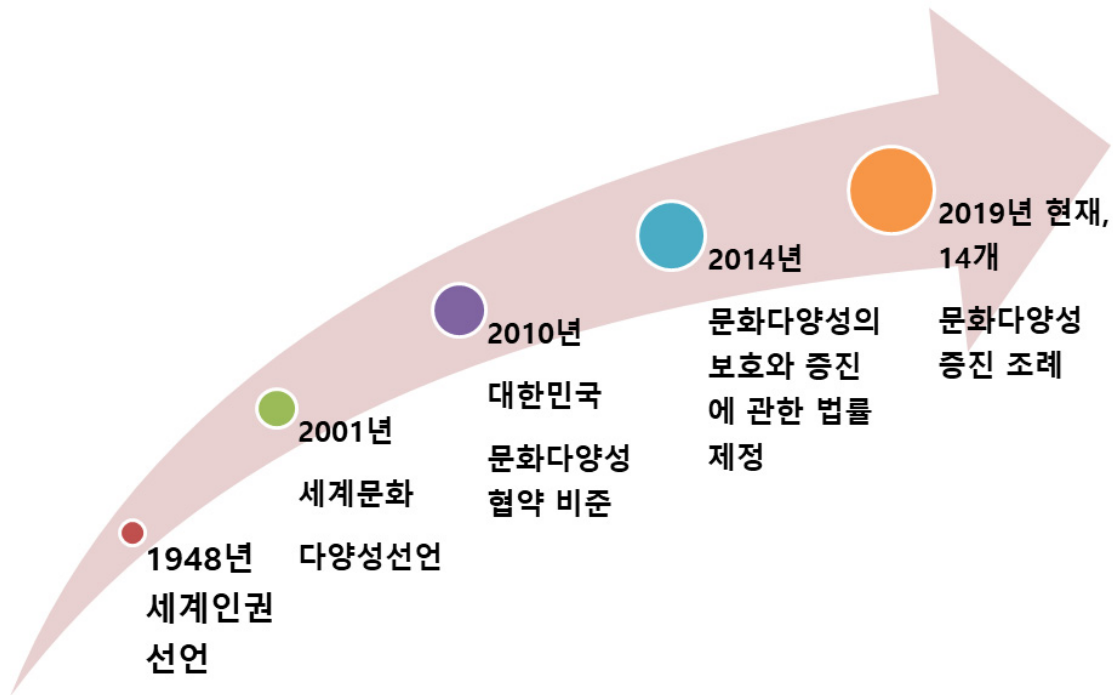
한국은 2010년에 110번째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했다.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문화다양성법이라 불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조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가치 혹은 단어를 인지하고 본격적인 가치 확산 노력을 시작한 것은 문화부의 지원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올리볼리 그림동화⁸⁾ 처럼, 무지개다리 사업과 관련 없이 매우 다양한 문화다양성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5) 2016. 3. 15. 조선일보 [한국인 32% 외국인노동자와 살기 싫다]

6)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5632>

7) 2017년 10월 10일 세계일보 [갈등 폭발 일보직전의 대한민국]

8) <http://www.ollybolly.org/> 다음세대재단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시아문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한국에 소개되지 않는 제 3세계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웹상에 콘텐츠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동화 제작국의 언어 및 한국어와 영어 3개 국어로 동화를 즐길수 있다. 현재는 13개국, 르완다,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티베트, 필리핀, 한국 동화 80여 편이 소개 되어있다.



3) 정부정책과 문화다양성

① 새문화정책 준비단과 문화비전 2030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블랙리스트 사태와 국정농단문제로 인해, 문화부의 여러 사업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으나, 문화다양성 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유지된 소수의 사업 중 하나였다. 탄핵이후 들어선 정부로 정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없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정부의 문화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새문화정책 준비단을 구성하였다. 새문화정책 준비단은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분과로 구성하여 다양성을 핵심 3개 의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문화비전 2030의 3개 가치 방향, 8대 정책의제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을 설정하였다. 문화비전 2030에서는 ‘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3대 방향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하였고, 8대 기조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이 명시되었다.

더욱이,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화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아시아태평양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7~2020년이다. 이로써, 다양성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의 핵심의제가 되었다.

② 국가중장기 계획

앞서 언급했듯이, 2018~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는 5가지 주요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로 정했으며, 이중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가 명시하고 관련 사업 시행을 기본계획으로 포함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2차계획에서 삭제되었던 문화다양성이,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3개중 하나로 명시되었다.

③ 정부의 헌법개정안

비록 개헌안이 발의되지 못했으나, 2018년 3월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족문화의 창달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第9條 國家는 <u>傳統文化의 계승 · 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u>	제9조 국가는 <u>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u>
---	--

4) 국가 중장기 계획 및 국제기구 국가보고서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살펴보면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중장기 계획에 문화다양성 확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있으며, 유엔 기구 등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도 문화다양성을 빈번히 언급하고 있다.

①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1차 계획(2008~2012)에는 해당 문구가 없었으나, 2차 계획에(2012~2017)에서는 19개 중점과제 중 [3.(인권)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존중]으로 들어가,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문화다양성 존중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2018~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 3차 기본계획에는 5가지 주요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로 정했으며, 이중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가 명시하고 관련 사업 시행을 계획에 포함하였다.

②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는 제 1차 (2007~2011)에서는 [VII.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항목에 [쟁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으로, [추진과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으로 들어가 있었으나, 제 2차(2012~2016)에는 문화다양성이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항목에서 삭제되었고 이주민분야에서 ‘무지개다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도로 표현되어 제 2차에 기본계획에 이르러 오히려 삭제 및 축소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0) 권고안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핵심과제로 넣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문화다양성 존중정책이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3개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실시를 명시했다.

③ 국가별인권정기검토제도(UPR)

한편 한국정부가 UN인권이사회에 제2차 국가별인권정기검토제도(UPR) 정부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보고서 속에서 문화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22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네팔);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철폐로 한 노력을 강화할 것(알제리)	수용	위 권고 21에 대한 답변 참조 차별에 대한 인식제고교육 및 캠페인 차원에서 2012년 이래로 문화예술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중이다.
30	인종차별주의(racism),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쿠바)	수용	재한외국인처부기본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을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시행중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는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다.

위 표와 같이 다양한 차별철폐 노력을 위한 대책으로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그 대책으로 명시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주요 전략과 대책으로 문화다양성을 기술하고 있다.

④ 사회권규약위원회

사회권위원회(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위원회)에 2016년 5월에 제출한 제 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제 15조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 부문에서 문화다양성을 다루고 있다. 총164개항으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문화권은 150~164번항에 기술하고 있다. 과학기술(161~164)제외하면 총 150~159항중 153~156번항 총 4개항을 문화다양성에 관해 기술하며 매우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154번 항에서

154. 문화다양성정책은 소수 문화의 표출기회를 보장하고 소수 그룹의 문화생활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창조력 및 포용력을 확산시키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하생략
고 표현하며 소수 문화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UN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대한민국 정부의 제 4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부족에 우려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하기도 했다. 9)

문화다양성

65. 위원회는 당사국 시민의 다문화주의 수용이 낮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비시민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인지하면서도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 15조)
66.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a) 비시민에 대한 편견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에게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장려할 것
 - (b) 문화다양성 수용 정도에 관하여 취한 조치의 영향을 모니터링 할 것.
67.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두가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1호 (2009)를 제시한다.

⑤ 자유권규약 위원회

한편, 자유권규약 위원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대한민국 제 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2015.12.3.) 15번 항에서 주로 성적지향에 대해 언급하며,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또한 당사국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위한 공공 캠페인과 공무원 훈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국가 중장기 계획과 국제사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서 문화다양성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주요 대응 전략과 과제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국정부가 문화다양성 확산에 투여한 예산 규모는 전국민의 인식 전환과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외치기에는 매우 민망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UN인권이사회 등에

9) 문서번호: E/C.12/KOR/CO/4

65. Cultural diversity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ow level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mong the State party's population. While noting the measures taken to facilitate the social integration of non-nationals in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ack of policies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that reach out to the population at large (art. 15).

6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Promote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mong its population, including by countering prejudices against non-nationals;
- (b) Monitor the impact of measures taken on the extent to which cultural diversity is embraced.

67.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21 (2009)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서 공식문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밝힐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대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이야기 하려면 그에 적합한 예산을 배정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3. 문화다양성의 필요성

1)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

공동체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다양성은 우리의 삶 전반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양성은 주류나 기득권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류가 이룩해 온 생활양식, 정체성, 문명 등을 즐기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 하지만 그간 한국사회는 다양성을 선택사항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성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생물 다양성은 생존 자체를 의미한다. 종의 다양성은 자연계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자연계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류 문명의 형성과 발전 자체가 다른 것과의 만남, 수용, 공존, 융합 그리고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으로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장려해야 하는 원칙으로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별 문화적다양성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더욱 다변화되고 다양한 가치가 발현되고 공존하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개인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을 누려야 한다. 이때 서로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며, 이는 곧 인권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2000년 2월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문 [인권과 다양성]에서는 인권과 문화다양성 사이의 연관성을 명시했으며,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다양성과 인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회구성원들이 문화다양성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이다. 만약 차이를 다양성의 관점이 아니라 구분과 배제의 이유로 활용하여, 차별의 근거로 이용한다면 이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증진법의 제1조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이 법안의 주유 목적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과 차별을 치유하고 방지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3조 3항은 아래와 같은 차이를 명시하여 다양한 종류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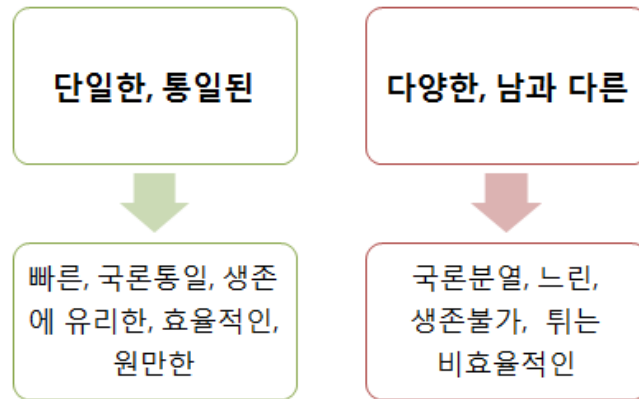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과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거나, 우리 이제 다양해지자고 말할 수 없다. 타자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차이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 공존하자며 종용하는 것은 다양성의 증진이 아니라, 다수자에 의한 또 다른 강압일 뿐이다.

문화다양성의 진정한 실현은 주류와 다수에게 소외되고 억압받는 소수자의 기본적 인 권리인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사회 정의에 맞게 실현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집단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다. 문화다양성의 실현은 타인과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옹호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기본적으로 널리 인식된 상태에서 문화다양성 활동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2) 단일 이데올로기 극복

단일주의, 획일주의가 생존에 필수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믿어왔던 한국 사회에 어느 날 갑자기 다양성을 옹골치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은 나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단어로 생각되기도 하고, 설령 관련이 있다 해도 나 자신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변화되어야 할 주체임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화시대를 거쳐 오며 한국사회에서 다양하다는 의미는 ‘통일된’ 또는 ‘단일한’의 반대 의미로 혼란스럽다거나,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구조 속에서 단순히 ‘문화다양성을 확산하자!’ 라는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는 어렵다. 문화다양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관련된 일이다. 당연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일이다. 단순히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며 곳곳에서 가치와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일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음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흑인들은 버스와 식당, 그리고 학교에서조차 백인과 함께할 수 없었다.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는 일이 아름다운 꽃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류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이 유행에 편승하는 사업영역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일시적인 활동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노력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모두가 지치지 않고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

3) 개인과 공동체의 경쟁력 강화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성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과 공존의 개념으로 다루었지만, 다양성은 공동체 또는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이다. 3T 이론으로 알려진, 토론토대학교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의 창조계급론에 의하면, 관용(Tolerance)’이 도시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룬다고 한다. 관용(포용)이 있는 사회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Talent)가 모여들고, 이를 통해 기술(Technology)이 발전하면 도시와 공동체에 발전과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스콧 페이지 교수는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Diversity trumps ability)는 이론을 제시했다. 덜 똑똑해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덜 다양한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뜻이다.¹⁰⁾

‘똑똑하지만 덜 다양한 그룹’보다,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그룹’이 복잡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며, 더욱 생산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성을 갈등 해결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정치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관점에서만 보아 왔지만 다양성은 위와 같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스콧 교수는 집단오류=평균 오류-다양성(The Crowds Error=the Average Error-Diversity)’이라는 공리를 입증하며 집단지성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국가 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재빠르게 대처해야만 이후에도 경제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며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4차 산업혁명에서 바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 바로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있어, 한국은 다양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¹¹⁾ 고 말했다. 또한, 이재승 교수(고려대 국제학부)는 ‘진정한 다양성을 지닌 교육 내용과 기관들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¹²⁾ 고 말하고 있다.

10) 2014. 3. 14. 매일경제 기사 ‘덜 똑똑해도 다양하게 뽑아라’

11) 2016. 10. 19. ScienceTimes, 슈밥 “한국은 다양성과 유연성이 부족”

12) 2017. 9. 20. 한국일보 기고 [아침을 열며] 4차 산업혁명의 액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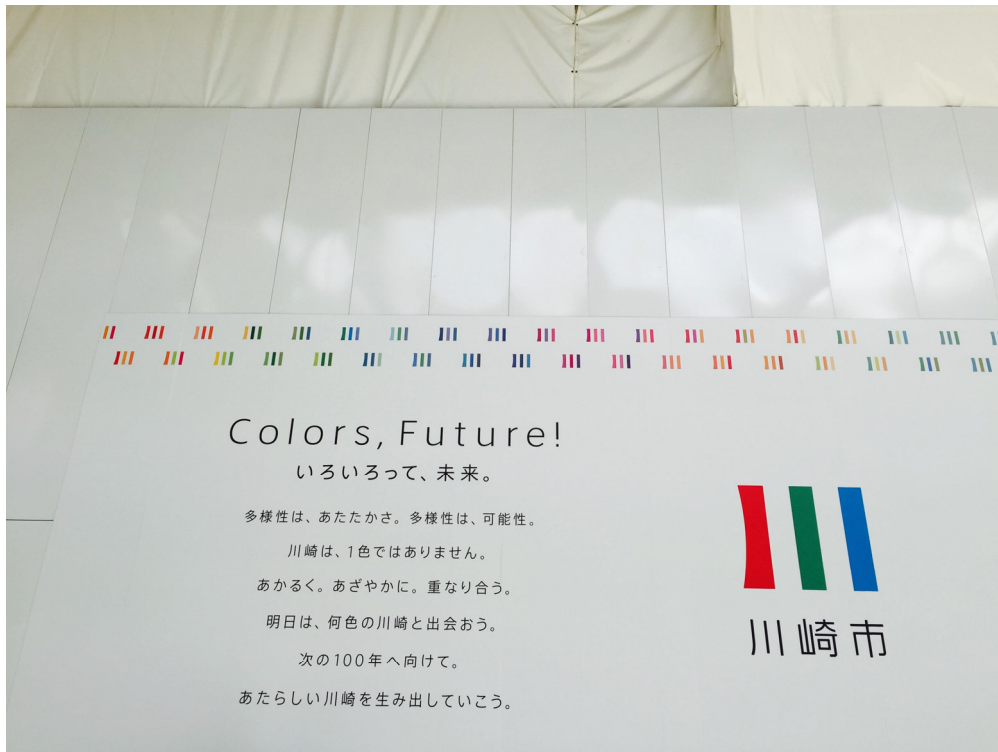


사진: 일본 가와사키시의 공공시설물 표어, 다양성이 미래다!, 가와사키시는 다양성을 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다양성은 단기간의 노력과 의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을 성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다양성 즉, 인종, 종교, 성별 등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이를 통해 개개인과 우리 사회의 실용적 측면의 경쟁력도 강화 된다. 이처럼 다양성을 공동체에서 보장하는 일은 윤리적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일이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4.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1) 다양한 구성원 간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에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소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항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의 똑같은 구성원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문과 괴담, 잘못된 정보로 형성되고 고착화 되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길이다.

최근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¹³⁾ 학교 또는 직장동료, 친구관계, 친척관계 등 접촉 가능성이 높은 관계일 때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왔다. 특히, 자신과 동일한 직장이나 직군에서 일하지만 서로 만날일이 없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다른 경우 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다문화교육을 3회 이상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다문화수용성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몇 년 전 유럽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은 비주류와 주류사회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과 교류하지 않고 각자 물리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거주하는 것만으로 다문화주의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대한 반성이었다. 이후 더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강조하는 일종의 ‘상호문화주의’가 이야기하는 것 또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소통과 교류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모두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 무지개다리 사업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의 경우, 2012년 사업 초기에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점차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의 주요자원과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킹과 공동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다양성 진흥 기반 마련 △소수자 문화의 영향력 증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라는 3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게 된다. 이런 실천 추진전략 속에서 각 지역재단 및 공공기관 그리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많은 협력기관들은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기존의 다문화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다양성 개념 정립도 없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대부분의 담당 인력로부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고 참고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도 많았다. 실제로 개념연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사업 구조와 다르게 문화다양성 개념연구는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14년에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2019년도 8년차에 이르면서 각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25개 사업운영 기관에서 24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26,321명이 참여했다¹⁴⁾.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되면서 경험이 축적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아직까지 선행 성과나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험적인 시도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안상수 외 (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14) 2017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보고서,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2016년 12월 전라남도 의회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했다. 2018년 4월 현재 13개의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되었다.¹⁵⁾

[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¹⁶⁾]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경기도
조례 제정일	2016. 12. 1.	2017. 1. 1.	2017. 2. 13.	2017. 3. 13.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정일	2017. 3. 22.	2017. 5. 18.	2017. 6. 2.	2017. 6. 14.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구로	전북 익산시	경남 교육청
조례 제정일	2017. 11. 10.	2017. 11. 16	2017. 11.30.	2017. 12. 28
	서울특별시 강북	전라북도		
조례 제정일	2018. 1. 5.	2019. 4. 5,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의 내용에는 문화다양성법에는 없는 주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조례에는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 기금 마련 항목이 추가되었다. 특히 더욱 중요한 사항은 차별사항이 인지된 경우, 도지사가 권고를 내릴 수 있고 이후 구체적인 지원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에 매우 중요한 도약이다.

4) 조례 제정 이후 후속 활동

조례 제정 이후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배정과 후속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문화다양성증진단’에서 재단과 광주시 문화예술과가 함께 지속적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조례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산하에 문화다양성 위원회가 2018년도 초에 설립되었다. 문화다양성 예산으로 2018년 5천만원이 배정되어,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9년에는 1억원이 배정되었다. 또한, 2018년도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대상 교육에 문화다양성 과목이 추가되었다.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외, 성과평가 항목에 문화다양성 항목을 추가하여 제도적으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틀을 만드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은 기존의 문화다양성 자문위원회에 이미,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시 문화예술과 과장, 언론사, 교육청, 부산발전연구원, 각계 전문가 및 재단 관계자가 참여해서 주요한 일정을 논의하고 결정해 오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주무부서에서 예산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단에서 이를 집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이후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2018년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추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구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향후 문화다양성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에서 무지개다리 사업을 하는 6개 지역 문화재단(구로, 성북, 성동, 서대문, 은평, 종로)가 협력체를 구성하였다.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혐오와 차별이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상황 변화 속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되고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더해진다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그리고
봄見청聽춘春"

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국내외 사례와 충청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

구자호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국내외 사례와 충청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

구자호(부천시 문화다양성조례제정위원장)

1. 문화란 무엇인가?

1) 레이먼드 윌리엄스. [keywords]. 1983.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서너 개 단어들 중 하나이다. 그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용법이 있다. 1) 한 개인이나 집단의 지적, 정신적, 심미적 능력을 계발하는 일 반과정(지성의 도야), 2) 지적 산물이나 지적 행위, 특히 예술 활동(예술문화), 3) 한 인간이나 한 시대, 혹은 한 집단의 특정한 생활양식(인류학적 문화 개념)이 그것이다.”

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2001.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3) 한국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2013.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인가?

1)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제4조 정의. 2005.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14.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왜 문화다양성을 제도적(정책적)으로 보호, 증진해야 하는가?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1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조항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미.

2) 차별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

- 포스트구조주의 관점 : “문화를 일관적이고 질서 잡힌 체계로 파악하는 대신에 특정 맥락에서 진행되는 권력과 지배에 대한 투쟁 속에서 상호 충돌하고 상호 교차하는 파편들의 집합체로 파악해야 한다.”¹⁷⁾
- 차별을 할 수 있다는 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 우리사회 (권력)의 소수자 :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슬람, 이주민, 동남아시아인, 노인 등
- 캠페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 단적인 예, 장애인교육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등
- ‘장애인을 차별해야 한다’고 대놓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신의 권력(이익)을 나눠야 할 때는 차별을 ‘실천’한다.

3) 권력을 나누는 최소한의 방법

- 제도(법, 조례)를 통해 보장

17) 필립스미스, 2015년,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208쪽.

4. 문화다양성 제도 연표

날짜	내용	비고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10년 7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발효	
2013년 12월 30일	문화기본법 제정	
2014년 5월 28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16년 12월 1일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위원회, 센터
2017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단서조항.
2017년 2월 13일	목포시	
2017년 3월 13일	경기도	위원회, 센터 없음.
2017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	
2017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단서조항. 위원회만 있음.
2017년 6월 2일	제주도	
2017년 6월 14일	경기도교육청	
2017년 11월 10일	충청북도	단서조항. 위원회만 있음.
2017년 11월 16일	서울시 구로구	위원회, 센터 없음.
2017년 11월 30일	익산시	위원회만 있음.
2017년 12월 28일	경상남도교육청	
2018년 1월 5일	서울시 강북구	위원회, 센터 없음.
2018년 2월 20일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헌법학회	

1) 2018년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자료집 중 ‘문화적 다양성’

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시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보건)권, 주거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도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포함시켜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제10조에서 선언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문화와 시민의 권리

넓은 의미의 문화란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을 말한다(교육부). 문화는 대체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다. 누구든지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문화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문화의 창조·진흥을 위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주체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를 존중할 의무는 물론 타인의 문화(관습)도 존중해야 하는 상호주의적인 요소를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 기본권분과에서는 문화부분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시대적 그리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데에 공감하였다. 따라서 제1장 총강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다양성을 강조하였으며 제2장에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포함시켰다. 자문위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강, 제9조 전통문화, 민족문화

현행헌법	자문위 조문시안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u>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u>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권 분과에서는 현행헌법의 ‘전통문화’ 강조로 충분하다고 보아 현행헌법의 ‘민족문화’를 삭제하고 문화국가,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창달’을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로 개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 위 자료집 중 ‘평등권’ 부분

발표자료

현행헌법	자문위 조문시안
<p>第11條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p> <p>③ 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p>	<p>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p> <p>② 누구든지 性別,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현행 ②, ③항 삭제〉</p> <p>③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p>

2) 기본권, 평등원칙에서의 문화

현행헌법과 같이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지하였다.

3) 평등원칙 조항 이외에 아동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함께 노인의 권리를 평등권 독립조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시안으로 모든 노인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품위를 지키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원만한 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문화 하였다.

4) 자유권에서의 문화

현행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권에서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를 유지하되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이외의 종교, 신앙, 출판, 표현의 자유 등은 문화라는 언어적 표현이 없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문화에 속한다. 또한 정보권의 하나로 ‘정보문화향유권’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유엔 사회권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안에서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현행헌법	자문위 조문시안
<p>第34條 ① 모든 국민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p> <p>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p> <p>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p> <p>⑤ 身體障礙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p>	<p>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p> <p>(현행 제34조 ③, ④, ⑤항 삭제; 조문시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로 이동)</p> <p>③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p>

5.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사례

1) 진행과정

- 2017년 문화다양성 라운드 테이블 진행
-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잠정 중단
- 2018년 12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재개
- 2019년 3월 초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로 전환
- 2019년 3월 25일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19년 4월 24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조례 상정, 보류 결정
: 대표발의 양정숙 시의원
- 2019년 6월 부천시의회 임시회 재상정 예정

2) 과정상 특징

- 문화다양성 관련 민간단체들이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10개 문화/예술/사회/시민/여성/대안학교 단체, 문화재단, 시의원2명
-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 내용의 특징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 ②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나이, 신분, 장애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말하며, "문화적 차이 존중"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 ‘문화적 관용’이라고 표현하는 조례의 문제점은 ‘관용’에는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음.

=> ‘성’,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제3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차이 존중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인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5.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아동, 청소년, 공무원 그리고 일반시민 등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철학 교육
2. 사회구성원간 존중과 교류에 관한 교육
3. 인간존엄성에 토대를 둔 교육
4. 문화적차이 존중이나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0조(문화다양성의 날) 시장은 “법” 11조에서 지정한 ‘문화다양성의 날’ 전 후에 기념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부천시문화다양성 계획 및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부천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천시문화다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¹⁸⁾을 따른다.

1. 문화적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
 2. 문화예술진흥·복지·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부천시의회 의원 2인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¹⁹⁾ 규정을 준용한다.

18)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실행위원을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다.

③ 전문실행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권고 등)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문화적 차별행위의 신고 및 심사 등) 문화적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문화다양성 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고에 대하여 문화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문화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제 16조에 따라 해당 문화적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또그리고
봄見 청聽 춘春"

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²⁰⁾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1. 우리 사회 다양성의 증대와 국내외 정책변화

1) 현대사회의 특성과 다양성 증대

■ 인구감소 시대로의 진입과 인구구성의 다변화

- 한국은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그룹으로 2031년부터 본격적 인구감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의 감소는 현재의 사회구조는 물론, 사는 방식 등의 변화를 가져 오는 결정적인 요인임.
- 또한, 인구구성의 다변화가 예상되는데, 한국인이라는 인종적·민족적 정체성의 모호 해지고, 있음. 2017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가 186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6% 차지함.
- 특히, 국내 청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반대로 다문화 청소년인구의 지속 증가 추세로서 미래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미래 한국인의 지배적인 인종·민족적 특성이 동질성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시사함.

■ 가족구성의 다변화: 가족의 개인화

- 한국 사회는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현재, 1인가구가 54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7.9%를 차지함.
-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7)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35년 약 764만 가구, 2045년 약 8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청년실업 및 소득불안정 심화로 인한 결혼 지체나 포기,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 이혼과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 등의 증가 현상을 의미함.

■ 여성인구 증가, 그러나 위협받는 여성의 삶

- 2018년 여성인구가 전체 인구의 49.9%를 차지하고, 2040년에는 50%, 2050년에는 50.1%로 증가할 전망으로 2018년 여성가구주도 607만 2천 가구를 기록.(2000년 대비 12.2% 증가)

20) 이 글은 부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포럼의 발제 원고를 부분 수정한 것임.

- 여성고용률의 증가에도 여전한 성별격차와 차별이 존재하며, 여성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고용형태, 경력단절, 인사차별 등은 달라지고 있지 않음.
- 여성에 대한 폭력의 다종화 및 확산으로 인해 여성은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여성의 삶이 위협받고 있음.

■ 혐오시대: 혐오표현(hate speech) 및 증오범죄(hate crime)의 확산

- 사회적으로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상 혐오와 증오는 오락화 되는 경향까지 있음.
- 혐오 표현은 하나의 표현으로 존중받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성 상실을 초래할 폭력성을 담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임에도 그 증가 속도와 범위는 가속화되고 있음.
- 일상화된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 등은 혐오와 증오의 보편화 혹은 범죄로 연결되는 상황이며,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문화다양성이 제기되는 국내 환경

■ 문화다양성의 개념

- 문화다양성은 한 사회나 국가, 혹은 권역에서 언어, 관습, 종교, 생활양식, 정체성 등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함.(이동연, 2013, 44쪽)
- 이는 문화적 차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 차이가 서로 공존하는 것을 의미함.
- 글로벌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경, 인종, 종교,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함.

■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점

-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 이슈는 국내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도입과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 이주민의 증가로부터 출발하였음.
- 200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신설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그리고,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신설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깊은 관계가 있음.
- 이는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증대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 문체부는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는 각 위원회에 결합되어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실시하였음.

■ 동화를 넘어 선 문화다양성의 제기

- 문화적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혹은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 지원을 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적 다양성 인식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 이슈가 수면으로 올라옴.
- 한편, 2005년 이후 세계적으로 확장된 문화다양성 이슈는 마침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을 결의하였고, 2009년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내적 강제력이 발생하였음.
- 특히,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다문화정책이 외국인 이주민, 결혼 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한국사회 내 새로운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점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었음.
-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문화 가치들을 서로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
- 또한, 문화다양성은 인종과 민족에 따른 문화 간 다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존의 태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였던 문화의 내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음.

■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제기

- 우리 사회의 오랜 정서를 극복하고 현대 사회가 문화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깊은 관계가 있음.
-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성은 확장되고 한층 강화되고 있음.
- 더구나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삶의 방식이 전환되는 현실 여건에서 보면,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 소수자들과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문화다양성 이슈는 한층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3)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 환경

■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과정

- 문화다양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이 증대하는 현대사회 전 세계적인 이슈임. 이는 세계 2차 대전으로 본격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립된 내용으로, 인권, 문화적 정체성, 문화와 경제적 가치 등을 포괄하면서 발전함.
- 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어 발전하게 된 문화다양성 논의는 꾸준히 확산되어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통해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됨.

<표1>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 과정

년도	내용	비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3차 국제연합총회
1966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1회 국제연합총회
1992년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선언	유엔인권위원회 뉴욕총회
1995년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세계문화발전위원회보고서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제31차 유네스코 총회
2002년	5월21일 "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제57차 국제연합총회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출처 : ①한준(201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사업 결과자료집-문화다양성포럼'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현주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36 / ②김효정(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0 / ③한국문화예술위(2014), 「2014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PP30-31 내용을 재구성

■ 문화다양성의 개념 변화의 주요 내용

- 문화다양성 개념은 초기 강대국의 지배논리에 저항하는 담론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문화, 민주주의, 정체성의 문제 등을 포괄하고 점차 콘텐츠, 문화생산, 유포 등의 문화산업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문화다양성 개념은 개념을 활용하는 영역의 환경에 따라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문화 간, 문화 내 소수문화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산업과 통상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이슈임.

<표2> 문화다양성 개념 변화 과정

구분	내용
제1단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가 예술 생산의 관점에서 논의된 시기 - 개별 민족국가의 문화는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 - 다원주의는 국가 간의 문제로만 인식
제2단계	- 문화의 개념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시기 - 냉전 체제 속에서 강대국의 지배와 이념적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증가
제3단계	- 문화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과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 - 연구와 정책 입안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
제4단계	- 문화와 민주주의의 개념이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 -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개념의 확장

출처: 김규원(2014), 「국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7 재구성

■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제기되는 문화다양성 논의의 주요 이슈

- 문화다양성이 포괄하는 이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임.
- 최근 문화다양성 이슈는 보다 미세화 되어, 표현의 다양성으로부터 상징, 이미지, 메시지, 가치 등의 요소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창조, 생산, 유통, 보급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음.(류정아, 2016, 6-7쪽)

<표3> 문화다양성 주요 이슈

구분	내용
세계화와 문화다양성	- 경제적 자본에 의한 문화독점 및 문화 획일화 현상 우려 - 자국의 문화고유성 보존 및 문화다양성 쟁점 부상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 문화권 수호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논의 본격화 - 경제자본에 의한 문화 획일화에 대응한 문화다양성 논의 확대
소수집단권리보호와 문화다양성	- 소수집단의 권리보호를 통한 문화다양성 보호 - 소수민족, 원주민, 소수인종 등의 집단적 문화권리
문화정체성과 문화다양성	- 문화는 표현의 문제와 생활양식,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 포함 - 문화정체성은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 사회적 결속, 발전의 문제”의 확장된 개념

출처: 김효정(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9-12 재구성

■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의무

-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협약 9조에 따라 매 4년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해당국에서 취한 조치를 유네스코에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국과 공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제반 정책 및 사업을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동의 수준과 함께 국제 기준은 문화다양성정책을 수립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아태지역 활동의 제기

-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원국에 선출되었으며, 2021년 6월까지 4년간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음.
- 지금까지 우리의 현안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던 자세에서 탈피하여, 저개발국과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김면, 2018, 3쪽)
-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다양성협약」 서명국은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

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사모아, 티모르 14개국에 불과함.

- 미가입국은 일본, 북한, 필리핀 등 30개국으로 유네스코 6개 그룹 가운데 협약 가입국 수가 가장 적어, 협약 홍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문화다양성협약」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특히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역량을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아시아지역 중개자로서 문화다양성협약의 가입과 실제적 실천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또한 문화관련 이슈가 유럽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는 기존의 환경에서 아시아적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외교를 추구해나갈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향후 국가경제 규모와 국제영향력에 부합하는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이슈 발굴과 전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2. 우리 사회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관련 정책 현황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립

■ 문화다양성 개념의 정책화 과정

- 2005년, 정부는 급증하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등의 국내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함.
-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다양성협약」 등 국제적 문화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문화다양성 이슈는 보다 보편화됨.
- 2014년 정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문화다양성법」의 제정

-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법」은 문화기본권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를 가지게 됨.
- 「문화다양성법」은 매우 기본적인 공공 의무와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문화다양성의 역할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략 방향, 권한과 제재 등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도 안고 있음.

<표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구 성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제2조 (정의)	문화다양성(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 문화적 표현(개인, 집단,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 표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책 강구, 자원 조성, 정책 수립/시행, 조사/연구,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 간 교류 및 협력
제4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 / 다른 구성원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률을 따름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함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국무총리 위원장,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8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
제9조 (연차보고)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 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제10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제11조 (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
제12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 / 문화시설 조성하거나 지원 가능
제13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
제14조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
제15조 (권한의 위임,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의 일부 위임) 문화다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단체의 장(사무 위탁)

출처 : 예술위(2017) 무지개다리 컨설팅 및 평가 사업, pp28-29

■ 문화다양성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는 문화다양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정책의 틀 속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본 과업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동시에 문화다양성을 전 사회에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로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기반을 제시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음.

<표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사업

구분	사업목적	세부사업명	내용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운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연구학교 운영 지원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지원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연수프로그램개발 연수운영)
		공감대 형성과 확산 및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 행사 운영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및 정책 홍보물 제작 배포 운영
	문화 간 상호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무지개다리 지원 사업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예술교류 및 소통활동 증진 사업
		컨설팅 및 평가 연구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및 평가 분석
		네트워크 워크숍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주체 간 인식공유 네트워크 운영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운영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자료 구축 및 시스템 운영
외교부, 교육부, 문화재청 협업사업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	남북 문화교류 확대 및 세계 문화다양성 증진	남북 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국제문화교류 증진 조성(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및 운영)
			한국문화원 등 문화교류 거점기관 확충 및 한국문화 홍보
			세종학당 확대 해외 한국어교육 운영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16년 문화다양성증진사업추진계획(안)」 내용 재구성

■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문화 분야 사업의 재구성

- 문화다양성사업은 기존의 문화·예술 영역뿐 아니라, 체육, 지역 협력, 국제 협력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관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포함함.
- 또한, 이는 각 사업마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설계, 집행, 확산, 환류 과정에서 관점의 구현을 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두고 있음.
- 특히, 「문화기본법」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에 문화다양성 지표를 설정한 것은 사회문화적 확장성을 설계한 구상이라고 볼 수 있음.

■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 8대 정책의제 중 하나인 ‘문화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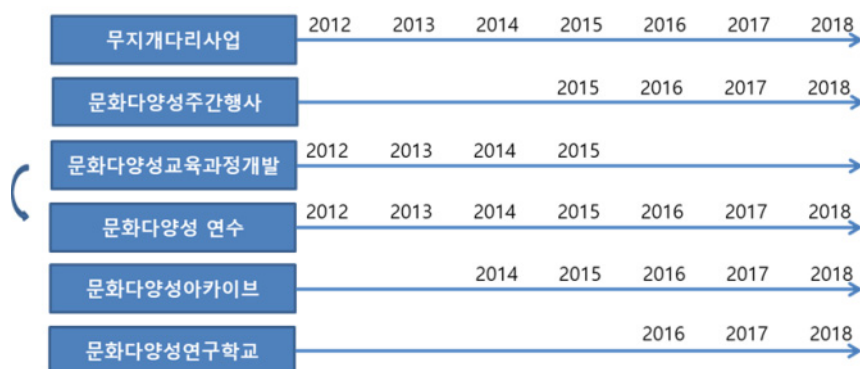
(그림1) 문화비전 2030 3대 방향

- 문체부는 2018년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사람이 있는 문화’의 정책기조를 발표함. ‘사람이 있는 문화’는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를 강조하였음.
- 「문화비전 2030」에서는 ‘사람이 있는 문화’를 위한 3대 방향으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하였음.
- 문화비전이 제시한 “다양성”은 ‘다양성을 한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문화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보고,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에 상관없이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은 현 정부의 문화정책 3대 가치이자, 8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문화정책에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2) 문화다양성사업의 전개

■ 문화다양성사업의 주요 전개²¹⁾

- 문화다양성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타진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사업은 크게 교육과정 개발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연수·워크숍, 인식 증진과 확산을 위한 활동 공모사업, 국민 공감 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는 전체 정부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확장하여 설계되기 보다는 문체부 산하 사업으로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설계된 측면이 있음.
- 문화다양성사업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현재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확장된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시대적 문제의식을 반영한 사업 설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그림2)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2017

■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표사업, ‘무지개다리사업’

- 현재 7년차에 접어든 문화다양성사업은 2013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였으며, 2014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로 이관되면서 지역의 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예술의 전당 등에서 무지개다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대 국민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명시한 문화다양성의 날(매년 5월 21일)을 포함하여 1주일간 진행되는 행사임.
- 2016년부터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막도시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서울 중심 행사에서 탈피하여 지역 중심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선도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2011년부터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여 연구되어옴.
- 특히, 서구의 시선과 다른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전통에 대한 다양한 고려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실험이 이루어짐.
- 이를 통해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교사, 문화전문인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실행되었는데, 2015년 이후 사업이 종료됨.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연수’

- 문화다양성은 가치관과 인식에 관한 것으로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하며, 지역 27개 운영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관련 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문화다양성 연수는 현재 문화다양성 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단체, 해당 지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임.

■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는 학교 내 문화다양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임.
- 2016년~2017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의 4개 학교가 지정되어 완료하였으며, 2018년 신규 연구학교로 금왕유치원, 현곡초등학교, 능원초등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3. 지역으로의 문화다양성 정책 확산

1) 지역 내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의 변화

■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확산

- 무지개다리사업의 영향으로 지역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은 급격히 확산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함.
- 2016년 전라남도를 필두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지자체의 실제적인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음.

<표6>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현황

구분	연번	지역	시행일	조례명
지방자치 단체	1	전라남도	2016. 12. 1.	전라남도조례 제4121호)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2017. 1.1 제정 2018. 7. 24 개정	광주광역시조례 제5111호)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3	목포시	2017.2.13.제정 2018. 12.17개정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198호)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4	경기도	2017. 3. 13	경기도조례 제5488호)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5	부산광역시	2017. 4. 23.	부산광역시조례 제5552호)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2017. 5. 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95호)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2017. 6.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60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8	충청북도	2017. 11. 10.	충청북도조례 제4098호)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9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 11. 16.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29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0	전라북도 익산시	2017. 11. 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715호)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1. 5.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 128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역 교육청	12	경기도 교육청	2017. 6. 14.	경기도조례 제5625호)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13	경상남도 교육청	2017. 12. 28	경상남도조례 제4418호)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 조례의 주요 구성²²⁾

- 전체 13곳 중 8개 지역조례에서 문화다양성 위원회 조항이 있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을 조례에 언급한 지자체는 11곳, 전문인력 양성을 조례에 언급한 지자체는 7곳임.
- 전체 13곳 중 9개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에 저해되는 표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2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2018.12.기준) 문화다양성 조례 내용 재정리

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언급되어 지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노력이 향후 예상됨.

<표7> 문화다양성 조례 내용 구성

조례내용	전남	광주	목포	경기	부산	서울	제주	경기 교육청	구로	충북	익산	경남 교육청	서울 강북	합계
목적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정의	0	0	0	0	0	0		0	0	0	0	0	0	12
단체장의 책무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시민의 권리와 책무	0	0	0		0	0	0		0	0	0		0	10
실행계획 수립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문화다양성위원회 역할	0	0	0		0	0	0			0	0			8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0	0	0		0	0	0			0	0			8
분과위원회		0				0				0				3
전문위원		0				0				0				3
문화다양성센터	0	0	0		0		0							5
실태조사	0	0	0	0	0	0	0		0	0	0		0	11
문화다양성교육	0	0	0	0	*	0		0	0	0	0	0	0	11
기금설치 및 운용	0	0												2
전문인력 양성	0	0	0	0		0				0	0			7
사무의 위탁	0		0	0						0	0			5
권고	0	0	0	0		0			0	0	0		0	9
협력체계 운영		0			*	0		0		0		0		5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0	0	0	*	0	0	0	0	0	0		0	10
포상(표창)		0				0 (표창)	0	0	0 (표창)	0		0	0 (표창)	8
사업추진					0									1
주간행사 운영		0					0							2

* 부산시의 경우, 조례 제8조(사업추진 등)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협력체계 구축,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조례 내용

① 문화다양성 조례의 목적

- 문화다양성 조례에서는 문화다양성이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문화창조,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 광주시는 문화다양성 조례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창의적

인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광주가 가진 정체성을 드러냄.

- 서울시와 서울시 기초 지자체의 조례는 “시민(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문화도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함.

② 문화다양성의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

- 문화다양성의 기본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데, 문화적 관용을 정의에서 언급한 지역은 광주시, 서울시, 충청북도로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 신체적 능력 차이에 따라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의함.
- 부산시와 서울시 구로구는 문화적 표현을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함. 광주시는 단서 조항으로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경우는 관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 전라남도, 목포시, 경기도, 서울시 구로구는 조례에 문화적 차별을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함.

③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

- 조례가 제정된 11개 지자체 모두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지자체에서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과 동시에 지역민이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또한,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경우, 실행계획 수립 시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체계를 잡는 조항을 명시함.

④ 문화다양성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문화다양성 위원회는 전체 11개 지역 중 8곳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 평가, 실태조사, 교육, 기금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유관 부서인 문화예술, 보건복지, 여성 관련 부서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광주시, 목포시, 충청북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을 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위원장은 대부분 지자체장이 맡으나 부산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광주시와 서울시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분과위원회와 연구 및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천력을 한층 높이고 있음.

⑤ 문화다양성 센터 설치 및 운영

- 11개 지자체 문화다양성 조례 중에서 전라남도, 광주시, 목포시, 부산시, 제주도에서는 문화다양성 센터를 설치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특히, 부산시와 제주도는 문화다양성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⑥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된 11개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운영 및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정책 및 제도, 사회적 인식,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산시는 문화적 요소 및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활동의 구체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익산시의 경우에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할 것을 명시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⑦ 문화다양성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된 총 11개 지역 중 부산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9개 지역 조례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언급되고 있음.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으로는 “문화다양성 조약·법규·정책,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특히, 광주시, 서울시,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강북구, 충청북도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자에 교사 및 청소년을 명시하여 학교 내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조례에서 언급한 지자체는 전체 11곳 중 7곳으로 광주시, 서울시, 충청북도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구체성을 높임.

⑧ 지역 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사업 명시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지역협력체 운영,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등을 조례에 명시한 경우가 있음.

- 지역협력체 운영의 경우 광주시, 서울시, 충청북도 조례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지역의 민간단체나 문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기구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확산에 주력하고자 함.
- 부산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치 확산, 교육사업,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명시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서울시 구로구와 익산시의 경우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및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함을 언급하였음.
- 제주도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의 운영을 조례에 명시하였음.

⑨ 문화다양성 저해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 장려를 위한 포상

-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다양성이 저해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부산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9개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시정 혹은 개선 요청을 권고하고 이행을 확인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문화다양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하는 조항이 있는 곳은 광주시, 제주도, 충청북도,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이며, 서울시,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강북구는 표창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함.

■ 지자체 문화다양성 예산 수립

- 현재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한 곳은 부산시와 광주시로 2018년 부산시의 경우 7천만 원, 광주시의 경우 1억의 예산이 책정됨.
- 부산시와 광주시의 문화다양성 예산은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의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지원되어 무지개다리사업에서 확장된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는 문체부의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수행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됨.

2) 충청북도 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

■ 문화다양성 정책의 설계

- 충청북도는 2017년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실효적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요구되고 있음.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및 규칙 수

외국인근로자 지원	50건
결혼이주여성 지원	64건
북한이탈주민 지원	54건
성차별 근절	65건
성소수자 관련 사업	1건
장애인 문화지원	44건
세대 간 갈등 해소	37건
전통문화 보존	115건
지역문화 발전	266건
예술의 다양성 확보	57건
종교의 다양성	4건
가족의 다양성	63건
저소득층 문화 지원	47건
문화다양성/종합	22건

지자체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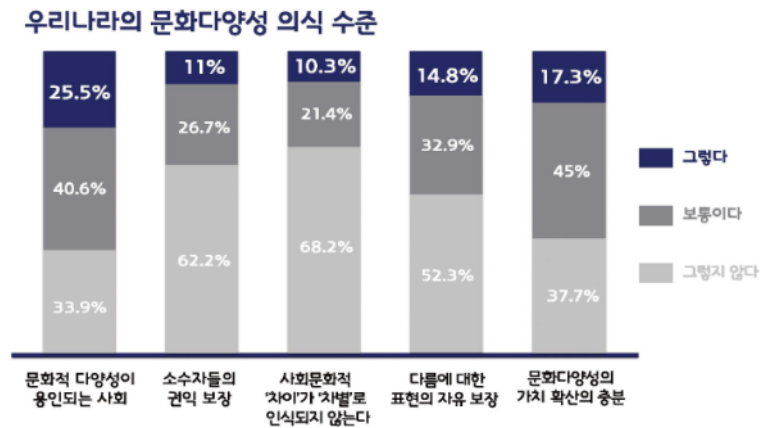


(그림3) 전국 지자체 문화다양성 이슈 관련 조례 현황

- 현재 문화다양성 조례에 의한 예산, 실태조사 등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광주, 부산, 제주, 서울 등으로 서울은 2018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문화관광연구원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이전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개 사업 영역 간 편차가 심하고 일부 영역(성소수자, 종교통합, 세대통합 등)에서는 취약성을 보임. 이는 문화다양성정책의 어려움과 민감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향후 다양한 접근방식이 요구됨.
- 현재 충청북도는 도 차원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 구축이 요구되며, 12개 시군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예산 편성은 물론, 정책 운영과 사회적 실천을 결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정책개발, 전문가 양성, 정책운영방향 구축, 공공행정의 우선적 혁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교육청, 복지기관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 등의 과제와 함께 해결해야 함.

■ 지자체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과제

- 충청북도 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는 조례 제정의 프로세스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조례와 달리, 문화다양성 조례는 도민의 동의, 문화 다양성 의식의 진전과 함께 진행해야 할 과제임.



(그림4) 우리사회 문화다양성 국민의식

출처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체부, 2017

- 2017년 한 조사에서 국민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리사회의 다양성 수용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소수성, 차이, 다름 등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함을 드러냄.
- 이러한 문화다양성 의식은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매우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지역적 여건과 합의를 모색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또그리고
봄見청聽춘春"

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충청권
5개 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소개

2019 대전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우리多문화人>

□ 사업목적

- 예술을 매개로 지역 내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교류 및 소통을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 추진방향

- 지역 문화다양성 네트워크(우리多문화 라운드테이블) 구축을 통한 무지개다리사업 협력 추진 및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교류·소통 진작
- 중장기적 사업 추진 인력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우수사례 실적 공유 등 지역 문화다양성 워크숍 개최
- 사업 참여자인 소수문화주체 구성원 및 시민 간 교류·소통을 위한 문화다양성 확산 시범사업(우리多문화전문가) 프로그램 기획·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2019. 3월 ~ 12월
- (대 상) 소수문화계층(유학생, 다문화가정, 노인) 등
- (장 소) 지역 문화예술기반시설, 대학 및 관공서 등
- (사업내용)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문화예술교류·체험 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우리多문화 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다양성 주체 간 상호 협력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정책 확산 및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운영
지역 인력양성 기반구축	우리多문화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의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우수사례 및 실적 공유 ■ 참여자 토론 및 관계자 네트워킹, FGI조사 진행 등
문화다양성 확산 프로그램	우리多문화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용 및 지역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문화주체 간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2019 세종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多화만사성」

□ 운영목표 및 운영방향

운영목표	다양한 소수가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	----------------------------------



운영방향	세대, 가족, 이웃 등 지역민 간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 문화주체들과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
	일상 속 참여와 체험으로 문화다양성 관심 제고

□ 사업내용

- 지역민 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 세대 간 문화공감의 장을 펼치는 북콘서트 개최
 - 가족과 이웃의 다양한 모습을 주제로 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진행
 - 세종·충북·대전을 잇는 지역 광역교통망(BRT 버스) 활용
- 지역 문화주체들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매개기관 라운드테이블 운영(14개 기관 참여)
 - 협력사업 모색을 위한 충청권 문화다양성 포럼 개최
- 문화다양성 관심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우리 주변의 문화다양성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전 개최
 -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커뮤니티 운영
-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다양성주간 체험행사 개최
 -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요일정

	프로그램	진행일정
지역특화 프로그램	多화만사성 북콘서트	5월, 10월
	多화만사성 BUS	5~12월
교류협력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라운드테이블	4~12월(4회)
	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포럼	5.21(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우리주변 문화다양성 사진공모전	7~9월
	온라인 커뮤니티 '모두다 多화만사성'	상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북콘서트, 영상상영, 체험프로그램 6종	5.24(금)~25(토)

2019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무지개다리사업 <다양성에 스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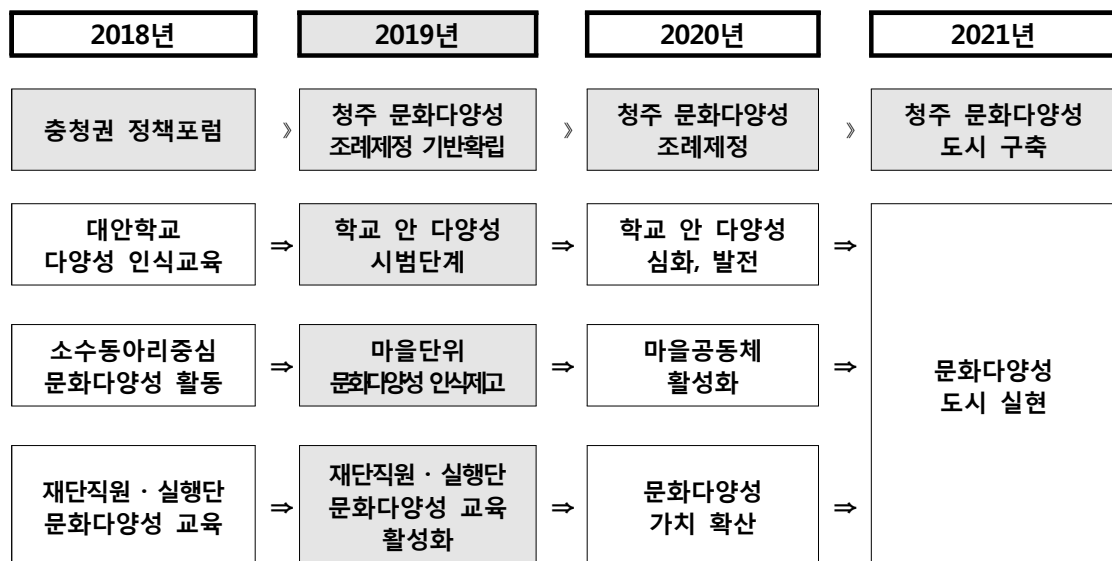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청주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및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사업 증진
- 문화 간 교류, 소통,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 문화 주체로서의 문화적 소수자의 역할 확대
- 지역 내 자생적인 문화다양성 기반의 사업 개발 및 정착

□ 사업개요

- 사업명 : ‘다양성에 스미다’
【문화다양성 개념을 일상 속에 녹여내고 스며들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추진방향
 - 일상의 삶을 문화다양성과 연계하여 가치 발굴(문화다양성 마을운영) 생활영역의 여러 소재를 문화다양성의 의미로 해석하여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문화다양성을 직·간접적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의견을 공유
 - 문화다양성 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수용시켜 실천하고 문화다양성 개념을 확립하고 문화예술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공유
 - 문화예술 쪽의 전문 매개자 발굴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소수문화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 현장을 알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중장기 사업계획



2019 충남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서로, 소리」

□ 사업목표

- 지역 내 외부, 소수 문화를 배척하는 배타주의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
 - 다수자 대상 소수 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모두를 위한 문화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문화다양성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생적 활동 환경 조성
 -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련 커뮤니티 조성 활성화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및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움직임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련 주제 쟁점화 및 이를 통한 지역 문화 성숙 도모
 - 상호 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다양성 관련 이슈화
 - 차별 없는 다양성 추구를 통한 지역 문화 향상
- 지역 특성 반영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내 문화다양성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 특성 반영한 명확한 프로그램 설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지역 내 문화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통한 활동 폭 증대

□ 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문화다양성 기반 구축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정책 위원회 <정책 데스크 ; 충남 문화다양성의 미래>
	문화다양성 라운드테이블 <화음 ; 하나의 충남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문화다양성 칼럼 <Focus Story>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 및 확산 프로그램	정신 장애 극복 캠페인 <가능성의 예술, 아름다움을 나누다>
	문화다양성 랙처 콘서트 <Life 溫 Music ; 그녀에게>
	문화다양성 공공 영화 상영회 <영화방 수다방>
	동물 유기학대 방지 및 보호 인식 캠페인 <두근두근 ; Pat - a - Pet>
	문화다양성 도서 캠페인 <사이 책방>
	청양 문화 더하기 <청년 기획단 '오픈 마이크'>
	우리 동네 별의별꼴 이야기 <우리동네 사람책 도서관>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캠페인 <알리오 올리오>

2019 충북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 사업목표

- 충북의 문화주체들의 문화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
- 조약돌네트워크 및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 협약 지속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내 지역의 민간 단체, 문화기관과의 협력기구 구축 및 운영

□ 기대효과

-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다양성 인식확산과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보호
-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연차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 기대
-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

□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가치 발굴 및 확산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통하는 우리, So 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프로그램 <소통하는 우리, So 通> - 일시·장소 : 2019. 5. 19.(일) 진천교육도서관 평생학습실 2019. 5. 25.(토) 보은교육도서관 시청각실 2019. 5. 26.(일) 제천 기적의 도서관 다섯나무극장 - 내 용 : 세계 문화다양성 동화 강의와 체험이 결합된 형태로 생애주기에 맞춘 특강
	문화다양성 확산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분야별(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국적, 직업, 장르, 세대 간 교류) 맞춤 프로그램 - 기 간 : 2019. 6월 ~ 10월
조약돌 네트워크	조약돌 네트워크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기존의 조약돌네트워크에서 확장되어 새로운 대상 기관 및 단체와 협업, 주체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을 이끌어가는 네트워크 구성. - 기 간 : 2019. 6월 중 네트워크 협의회 구축, 10월까지 3회 추진
	정책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지역성과 대상성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성 - 기 간 : 2019. 6월 ~ 10월 중 4회 추진
교류 협력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조약돌 네트워크 및 문화다양성에 관심 있는 충북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약돌 매개인력 역량강화 및 모듈별 교육형태의 과정. - 기 간 : 2019. 9월 중 추진 예정
	아카이브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와 나의 기분좋은 차이> - - 내 용 : 2019 무지개다리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결과물 공유 프로그램. 공연·전시·체험 등 사업 참여자와 충북 도민이 함께 즐기며 공유. - 일 시 : 2019. 11. 19 ~ 11. 22. 추진 예정